

한국자본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¹⁾

김 형 기

한국자본주의가 당면한 위기는 순환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기존의 발전모델이 해체되어 갔지만 새로운 발전모델이 정립되지 못함으로 인해 현재의 구조적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저생산성-실질임금 정체-저성장-양극화로 요약되는 구조적 위기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정립해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진전되었다. 이 시기는 고생산성-고임금-고성장-준완전고용이 실현되어 “한국자본주의의 황금기”로 부를 수 있다.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2차 대전 후 발전모델이었던 포드주의적 발전모델이 발전국가와 결합하여 “포드주의적 발전국가” 모델이 이 시기에 성립하였다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유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저성장과 양극화가 중첩되어 한국자본주의의 황금기는 끝난다. 2008년 이후에는 정치적 민주화가 후퇴한 반면 경제적 자유화는 더욱 진전되었다. 특히 금융시장의 규제완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경제적 자유 지수”(Economic Freedom Index)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금융시장은 미국보다 더 자유화되어 있다. 자본 자유화도 미국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폭넓게 도입되어 기존의 포드주의적 발전국가 모델이 해체되기 시작한다. 19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발전모델은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영미형 발전모델이 섞여 하이브리드화된다.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재벌체제에 주주자본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1) 본고는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2014년 12월 16일 개최한 학술대회, 21세기 한국자본주의 대는 쟁에서 발표된 내용의 요약이다.

체제가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재벌체제의 나쁜 측면과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고 기업의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단기주의를 부추기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의 나쁜 측면이 결합되어 성장과 분배 모두를 악화시켰다.

주주자본주의 요소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 경영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업은 장기투자를 통한 기업의 성장보다는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가를 높이고 배당을 늘리는데 주력하였다.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며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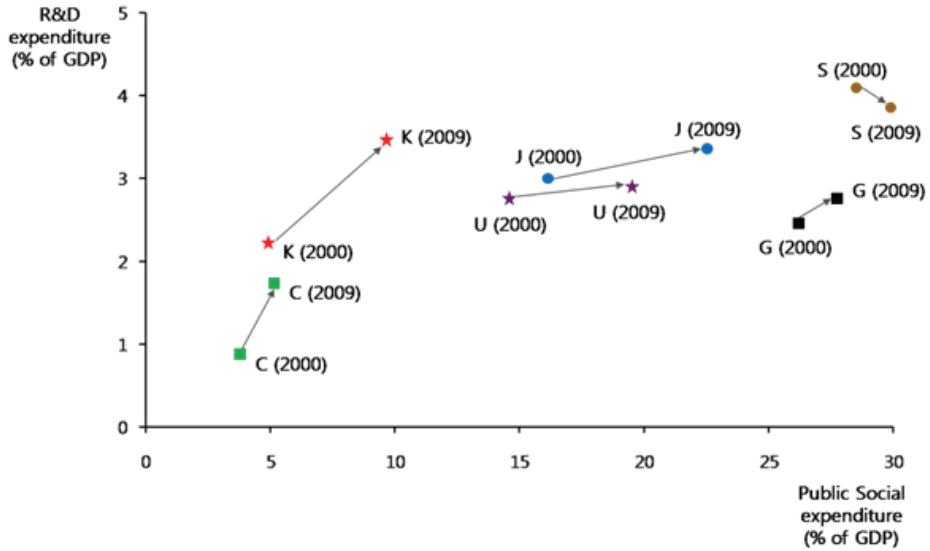
이러한 경영방식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는 둔화되고 자본소득과 노동소득간의 불평등이 심화된다. 여기에 대-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와 임금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구조의 양극화가 진전된다. 이러한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잉여를 단가인하를 통해 흡수함에 따라서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약화와 저임금과 저투자를 초래하였다.

한편, 그동안의 대기업 주도, 수출 주도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추격형 성장이었다. 추격형 성장은 기본적으로 모방에 기초한 성장이었다. 이러한 추격형 성장의 잠재력은 이제 거의 소진되었다. 중국의 기술 추격과 일본과의 상존하는 기술 격차로 인해 한국은 그야말로 넛크래커(nutcracker) 상태가 되어 버렸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선도형 성장으로 가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은 새로운 발전모델의 정립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자유화, 자본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감세,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패러다임을 기각해야 한다. 고삐 풀린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와 주주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잉여를 흡수하는 산업구조를 청산해야 한다.

금융규제, 자본통제,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증세, 큰 정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조정시장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생관계 형성 등,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높은 연구개발(R&D)투자와 인적자원개발(HRD)투자를 유지함과 동시에 공적 사회지출 비율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경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Source: OECD Database, Chinese Statistics Yearbook.

〈그림 1〉 지식투자과 사회투자 비율: 주요 국가



Source: OECD Database, Employment Outlook Labor Market Flexibility; 2013, UB Replacement Rates; 2011, ALMP Expenditure; 2011.

〈그림 2〉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삼각형: 주요 국가

같은, 높은 지식투자와 낮은 사회투자, 유연하고 불안한 노동시장 상태를, 높은 지식투자와 높은 사회투자,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이 실현되는 사회경제정책을 집중 추진해야 한다.

만약 한국자본주의가 이러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빠른 시일내에 정립하지 못한다면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져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지 모른다. 저성장, 저생산성, 실질임금 정체, 디플레 양상 등 당면한 한국경제 상황은 이미 일본형 장기불황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발전모델을 실현해야 장기불황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정립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서로 다른 이해와 욕구와 목표를 가진 경제주체간, 사회주체간에 상생의 영역을 찾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공유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노-사-정-민 사이, 보수와 진보 사이의 대화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특히 소모적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진보와 보수간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극단적 진보와 극단적 보수가 배격되고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최대공약수를 찾아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자본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테이블에 상정할 필요가 있는 주요 의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벌체제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결합

재벌체제를 유지하는 대신에 재벌은 주주, 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수용한다.

2)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실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대신에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지출 비율을 높여 노동시장의 안전성을 높인다.

3) 증세와 보편적 복지 실현

증세를 통해 공적 사회지출을 대폭 늘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과 실업자 재훈련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증가하려면, 교육·의료·육아·양로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4) 신제조업 육성과 금융규제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에 기초한 신제조업의 육성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을 제조업에 헌신하도록 엄격히 규제한다. 국제단기자본에 대한 자본통제(capital control)를 강화한다.

5) 중소기업의 집단거래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대기업이 부당한 단가인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잉여를 흡수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려면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 시 집단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E-mail: hkim@knu.ac.kr

